

#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 자격증 직원 2명뿐인 업체가 철거 해체계획 말뿐·감리선정 시능만 철거공사 아랫층부터 진행 정황도 동구청 한차례도 안전감독 안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린 안전불감증,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부실한 안전 대책, 안일함에 기댄 건설업체의 대충대충 시공,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의혹, 경찰 압수수색=무너진 건물 철거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주)한솔기업이 맡았다. 한솔기업은 지난 5월 14일 동구청에 10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신청, 같은 달 25일 허가를 받아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무너진 건물은 10개 중 맨 마지막 층으로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

한솔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2008년),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2012년)를 취득한 철거 업체다. 하지만 장비 운송 및 철거 불품 처리 등 운송비를 고려하면 외지 업체가 광주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고 당일인 9일 "한솔기업이 직접 철거한 게 아니라, 지역업체로 다시 하도급을 줬다"는 인근 재개발사업 철거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통상,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할 경우 3.3㎡당 20만~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하도급을 줄 경우 3.3㎡당 17~18만원선까지 떨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유가족들의 질문에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원청인 현대산업도 재하도급 업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동 건물 철거 작업을 맡은 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에 불과한 곳으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은 2명이 전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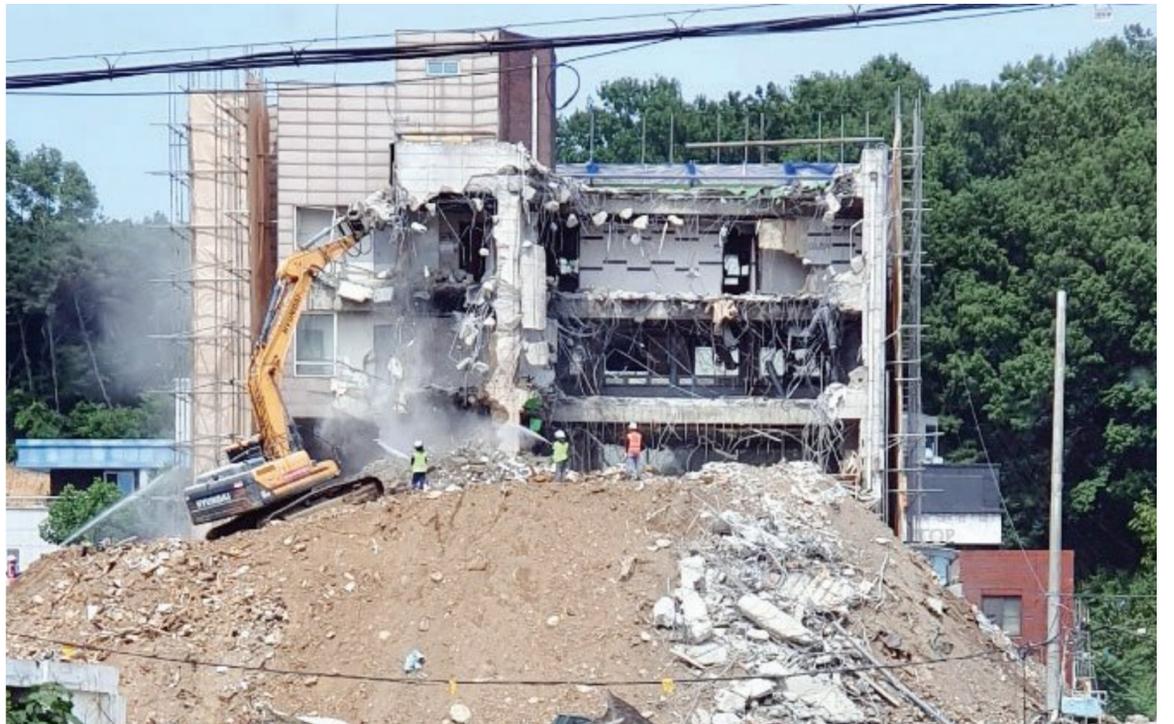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설비·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되면 안전 관리·감독도 소홀히 할 우려가 커진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철거에 나섰을 것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이 9일 해당 철거업체를 포함한 5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말뿐인 해체계획, 형식적인 감리선정=광주시 동구는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철거 업체는 동구에 제출한 '건축물 철거공사계획서'에 철거 안정성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철거 순서 등을 적시했다. 굴착기 등으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건축물 옆면 벽부터 철거하고 건물 5층부터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3층까지 철거를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와 장비 이동 뒤 1~2층 해체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동구청은 이같은 계획과 달리 지상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자 역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동구청은 판단했다. 동구는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를 지정했지만 위험한 공정으로 보이는 해체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동구청은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본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 시 3차례 가량 재개발 사업지를 찾은 적은 있지만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는



붕괴사고 전 철거 현장 10일 전날 발생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전 철거 현장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철거업체 작업자들이 건물을 층별로 철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층을 부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이 의심된다. /연합뉴스

커녕, 단속·점검을 게을리하면서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거세다. 임택 동구청장은 "업체 측이 구청에 낸 해체계획서가 적법한지, 국토부 매뉴얼 등을 준수했는지,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허가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고현장 찾은 김부겸 총리 "원인 철저히 규명"

### 이용섭 시장 "재발방지에 최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철거 현장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정책을 집행해온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 희생되신 분들, 유족,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 이런 철거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제정됐음에도 어찌 보면 원시적일 수 있는 사고가 나 안타까운 국민의 희생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소방청과 광주광역시에 현장수습과 피해가족 지원·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토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와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 방문 후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을 방문,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하다"며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참변을 당하신 유족들의 애절한 모습을 보니 죄스러움에

기슴이 미어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이 같은 원시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 현장부터 철저히 살피겠다.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다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광주시가 책임지고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히 사고원인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하청·감리 관련 문제가 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월 4일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이후 우리 시는 건설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시가 직접 나서서 허가 과정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야, 일제히 광주로... "진상규명·재발방지" 한목소리

여야는 10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번 사고는 분명 인재"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허술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낱알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전에 붕괴 조짐까지 나타났는데 대피 유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사고 현장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철거 건물 관련 안전조치 규정과 법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고 역시 인재임이 분명하다"며 "지자체와 시공사가 사고 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단순히 한 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끝난다면 이러한 사고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상무위에서 "철거 허가, 사전 안전 검사, 안전 조치 등에서 행정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도 함께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철거 방법이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안전 수칙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관성적이고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광주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이날 오후 각각 광주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에선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았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금명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